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론에 관한 논쟁*

梁 佶 炫 (경남대)

I. 머릿말

1998년의 한국은 소위 IMF 관리체제로 통칭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확대·신장시켜 나간다는 과제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되어 나가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2년의 수직적 정권교체에 이어 1997년의 수평적 정권교체라 하겠다. 특히 1997년의 정권교체는 헌팅톤이 지적하는 바 “민주화를 가져왔던 첫 번째의 선거에서 권력을 잡은 정당이나 정치집단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여 승자에게 정치권력을 넘겨주었다”(Huntington 1991, 266-267)는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성숙되어 나가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에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한국전쟁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하의 시사평론이 게재되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기된 소위 ‘건국사관’ 논쟁은 당사자인 최장집교수의 반론과 조선일보사의 재반론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시민사회단체간의 논쟁과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갔던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문제가 거론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거져 나온 이 논쟁이 더욱 많은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논쟁이 1998년의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하고 있는 제약과 성과, 그리고 향후의 과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 논쟁은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 이 글은 1998년 12월 19일 한국정치연구회 송년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고 여전히 한반도에서 냉전적 상황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남북한 대결구도로부터 연원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 논쟁이 인구에 회자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6.25가 갖는 역사적 무게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중앙일보』 98/11/19, 4)는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에는 조선일보사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간뿐만 아니라 공동정부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정치적 권력투쟁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 논쟁을 둘러싸고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최장집교수의 논문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인 양쪽의 견해는 여러 언론과 성명서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논쟁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와 반론, 재반론 등을 일일이 다 소개하게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양쪽의 입장 모두가 말로는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고집과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두 입장 모두 공격과 방어 무기로서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들먹이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전투성과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다.¹⁾ 이 논쟁에서 양측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표현 그리고 감정의 소용

1) 예를 들어 최장집교수에 대해 먼저 공격을 가한 조선일보사와 이에 동조하는 측의 자세를 보면 “최장집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월간조선), “최위원장의 사상에 대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검증을 촉구”(한나라당),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최장집 규탄성명서”(대한민국 건국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최장집위원장 사상, 깊은 우려와 분노”(박고협찬나라운동) “최장집교수의 표현은 이적행위”(대한참전단체연합회), “최장집위원장 사퇴요구 성명”(자유지성3백인회), “최장집교수의 사퇴와 좌파지식인 색출 요구”(성우회)에서 보듯이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념논쟁과 체계묵은 사상시비로 일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장집교수를 옹호하는 측도 “월간조선 및 조선일보의 왜곡·모해 보도”(최장집), “논쟁이 비이성적”(정치개혁시민연대), “월간조선의 메카시적 마녀사냥”(한국정치학회), “월간조선의 기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척도를 사용”(고려대 정외과 교수일동), “조선일보사의 무분별한 사상검증시비를 경계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선일보사의 편집증적 사상공세를 즉각 중단”(천주교 정의사회구현단), “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학문적 성과를 일방적 보도공세로 몰아부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한국시민단체협의회)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보듯이 조

들이는 한국사회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전혀 없이 적대와 대립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일반의 평가와는 어긋나게 민주화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인 이데올로기적 포용성이 전혀 증대되지 못한 채, 이번 최장집교수 논쟁에서처럼 오히려 “열등적인 메카시즘 현상”(이종석 1998, 41)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껍 안타까운 일이다.²⁾

II.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상 및 학문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 논문과 관련된 논쟁에서 제기된 사상의 자유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자유를 허락으로서의 자유와 능력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조건으로서의 자유 3가지 단계로 나눌 때(사르토리 1990, 412-413), 사상의 자유는 능력의 형태를 띤다고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상의 자유는 자율성, 자아실현, 의지 등으로 표현되는 내적 자유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등과 마찬가지로 내심으로 어떤 사상을 신봉하든 허용되는 능력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어떤 사상이 내면을 떠나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능력으로서의 사상의 자유와 함께 허락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띠게 된다는 점에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와 관련하여 논쟁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최장집교수와 관련된 하나의 쟁점은 최고수가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통해서 표출한 어떤 사상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사나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처럼 최

선일보사의 공세에 대해 역공세를 취하는 전투적인 자세로 일관되고 있다(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1998, 4-8).

2) 이종석은 남한의 경우 탈냉전과 비슷한 도정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포용성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포용성이 감소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이유를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는 거리가 있는 국내 냉전구조의 온존 상황”(이종석 1998, 41)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남한 “시민사회의 낮은 對北寬容度”(이종석 1998, 42)에서 찾고 있다.

교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이념을 부정적으로 평가”(『중앙일보』 98/11/14, 2)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 사상논쟁이란 결국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을 뜻하며 그 핵심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볼 때, 한국전쟁에 관한 최장집 교수의 논문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최고수가 한국전쟁에 대한 논문을 통해 어떤 특정의 사상을 표출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사는 보수는 우파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면서 이에 대립되는 진보 내지는 개혁은 좌파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고 그것은 곧 친북이거나 친공인 것으로 간주하는 냉전적 틀 속에서의 양분론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기든스의 지적처럼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좌파라는 것과 급진적이라는 것의 동일시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것”(기든스 1998, 88)이다. 더욱이 최장집교수는 스스로를 “개혁적 자유주의나 진보적 자유주의 정도로 생각”(『중앙일보』 98/11/19, 4)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최고수의 신념은 “자유주의 없는 공산주의는 지나치게 억압적”(최장집 1998, 132)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진보나 개혁이니 혹은 보수니 하는 구분은 오히려 정책상의 차이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이데올로기상의 좌-우 이념적 구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고르바초프 이후의 구소련과 현금의 러시아 경험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념상의 좌익이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 보다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적이라는 평가(김용현 1998, 187)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 논문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사가 제기한 논쟁은 개혁과 보수라는 정책적 차원의 구분을 이념적 차원의 차이로 전도시켜 바라보는 조선일보사의 편향되고 경직된 양분론적 틀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최장집교수의 자유주의적 신념이 담고 있는 우파적 성향을 무시하고 그 나머지의 반인 진보적 내지는 개혁지향성을 좌파일 뿐만 아니라 친북인 것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보다 실용주의적인 구분이 오히려 더 유용하고 건설적인 문제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욱이 사상의 자유가 능력으로서의 내적 자유로 존중되어야

한다면,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에 대해서도 이번의 최고수 논쟁의 경우처럼 특정 신문사가 한두편의 논문을 문제삼아 쉽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사상의 검증자가 되게 할 것인가”(『한겨레신문』 98/10/27, 사설칼럼)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리고 국익의 중대한 사활이 걸려있는 것으로 널리 공감되어 있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 역시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볼 것이다.

최장집교수의 사상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최고수가 단순히 상아탑 속의 학자가 아니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위치 때문이라는 조선일보사측의 주장도 몇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우선 조선일보사는 한국정치에 있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선일보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책기획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든가 아니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최장집교수의 사상이 한국의 중요 정책에 일정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도 조선일보사의 문제제기는 최장집위원장의 사상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이라든가 혹은 정책기획위원장의 전횡이 있다면 그러한 측면 또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조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점을 엄중히 책하는 데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사가 대통령 자문위원들이 어떤 고정된 관점이나 특정의 이념적 시각에 치중하여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우국충정(?)을 심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그 이유는 정책기획자문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책자문위원들 모두가 하나의 고정된 관점을 갖고 있을 때라고 볼 것이고, 만약 여러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상에 놓여있는 각자 자신의 고정된 관점을 제시한다면 — 필자는 이러한 경우가 더 실제에 가깝다고 본다 — 오히려 대통령 정책기획자문의 논의의 장은 다양한 견해와 관점으로 충만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온갖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각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김우창교수의 지적처럼 “사실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개방성”(『한겨레신문』 98/10/27, 사설칼럼)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자문위원들의 사상이나 관점이 개방적이고 유연하여야 한다는 요구 못지 않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개진된 관점과 견해들을 취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³⁾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직접선거를 시행하면 보다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에서 그 긴세월 동안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많은 피와 땀을 바쳐온 것이 아닌가.

최장집교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이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점과 관련한 조선일보사나 일부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아전인수식의 편향된 입장에서 비판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관련 논문에서 최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이념에 대해 균형된 시각과 ‘비판적’ 자세로 임했을 지는 모르지만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교수 스스로 강조해 마지않듯이 “남한정부에 정통성이 있음을 의심해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사가 최교수의 건국사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여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최장집교수가 해방 5년 내지는 8년사를 정리하면서 남북간에 균형을 잡으려는 앓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그만 북한의 김일성정부에 비해 남한의 이승만정부를 더 강도높게 비판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남북한 사이에서 가능하면 균형된 입장을 취하려는 최교수의 자세가 그만 남한 중심적인 사고를 고집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균형이탈로 간주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이 글의 3절 참조).

그러나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남한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무조건적인 반북 내지는 반공적 자세와 편향적 역사이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중도적이고 균형된 방향으로 옮겨 놓을까 하는 최장집교수의 학자적 노심초사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최장집교수가 주창하는 시각 조정의 필요성은 정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 제3의 해석 —

3) 지도자의 ‘조정’ 능력에 대한 강조는 양길현 1998, 319 참조.

마도 민중중심적 시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 을 찾아나서는 시도로서 의미 있는 학술적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최교수는 남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역사인식이 너무 한쪽으로, 다시 말해서 우편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선입관 때문에 이를 교정시키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다가 보니 그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해방 전후사에서 우파를 폄하하고 대신 좌파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한 불공정의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교수가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1980-90년대 한국의 민중들의 역사인식은 최교수가 우려할 만큼 한쪽으로 우편향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좌-우의 스펙트럼선상에서 다양함과 함께 중도적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학문의 자유

한국전쟁에 관한 최장집교수의 글이 쟁점화하면서 학계에서 나온 즉각적인 반응은 학문의 자유라는 근거에서 최장집교수를 옹호하는 다양한 논리의 반박 성명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전쟁에 대한 최장집교수의 글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학자로서의 최교수의 견해와 주장이기 때문에 이는 전적으로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통상 학문의 자유는 학문의 영역에 대한 외적 제약의 부재, 다시 말해서 통상의 경우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오는 외적 제약이든 혹은 갈릴레이 종교재판에서 보듯이 종교권력으로부터 오는 외적 제약이든 아니면 최장집교수 논쟁에서 보듯이 언론권력으로부터 오는 외적 제약이든 그러한 제약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에 속한 것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논쟁을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집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학문의 자유는 크게 두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새삼 재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학문의 자유가 만약 공익과 배치되는 경우라면 어떤 제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최장집교수의 경우처럼 학자(고려대 교수)가 공인(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 이전에 쓴 글을 놓고 현재 공인으로서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문제삼아 논쟁을 벌이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자유가 ‘외적 제약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제약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사르토리 1990, 415-416).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의 보호? 어느 정도까지의 해방?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특정한 시공간에 걸려있는 대상에 그리고 특정한 문화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지(그리고 얼마나 강렬하게 소중히 여겨지는지)에 달려”(사르토리 1990, 416)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학문의 자유 역시 일정한 정도로 공익과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학문활동이 순수학문이 아니라 정치학자인 경우처럼 역사와 정치, 사회에 관해 연구를 하는 것이라면 더욱 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고려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정치학자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게 되는 경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가 아니면 정치권력 내지는 여론의 향배에서 벗어나더라도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학자의 양심과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님을 강조해 두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얘기하는 학문의 사회적 연관성이란 학자 스스로가 설정한 틀 속에서 무한히 자유롭게 학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학문활동이 혹 빠지기 쉬운 자기도취라든가 논리적 고집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자기와 정반대되는 사람의 견해도 들어보고 꾸준히 자료를 모아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보완해 나가고 또 중요하게는 세상의 변화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상대성이랄지 유연성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고 싶다.

최장집교수의 논문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조선일보사의 자기정당화는 최장집교수가 대통령에게 정책기획을 자문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최장집교수가 가졌던 건국사관 내지는 정치적 이념이 현실의 정부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 논문에서 나타난 최교수의 정치관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의 학문적 성향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 임무이자 의무”(『조선일보』 98/10/23)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는 “국가정체성이나 이념에 반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학자가 공직, 그것도 국가정책 결정의 핵심을

이루는 요직에 임명될 경우 이는 한 사람의 정치학자가 논문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파급효과를 국가전체에 가져온다는 점”(『조선일보』 98/10/23)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최장집교수가 과연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관되게…좌파적 시각”(『조선일보』 98/10/23)을 견지해 옴으로 해서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나 하는 점이다. 물론 최장집교수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좌파쪽의 용어를 빌려쓴 것이 오해”(『중앙일보』 98/10/24, 2)를 부를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박성조교수의 지적처럼 “사회과학도의 용어선택과 정의의 중요성”(『조선일보』 98/11/5, 해외기고)에 비추어 볼 때 최교수의 일부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장집교수가 “어떤 글에서도 친북주의나 친김일성주의를 표방한 적은 없었다”(『중앙일보』 98/10/24, 2)는 점에서 그리고 조선일보사가 평소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친북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인색했다는 점에서, 최장집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성토는 공인의 국가관에 대한 시비를 통해 조선일보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의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정치적 의도와 색채를 더 강하게 띠고 있는 듯이 보인다.⁴⁾

더욱이 공인으로서의 최장집교수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상한 채 최교수의 학문적 성향에 대해서만 조선일보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의 UCLA의 신기욱, 존 던컨 등 한국학 학자 22명의 지적처럼 “현정부에 참여한 최교수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없고 과거 연구만을 맥락에서 분리해 매도(함으로써)…학문의 자유를 침해”(『동아일보』 98/10/31) 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장집교수가 학자로서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내심으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어떤 특정의 이념적 성향을 선호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기든스의 지적처럼 “정치적 삶은 이상이

4) 최장집교수의 논문에 대한 조선일보사와 일부 정치권의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중요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하나는 최장집교수가 현재 몸담고 있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제2건국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한나라당의 공격과 최교수의 대통령제 존속 발언으로 기분이 언짢은 자민련의 반발이 최장집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21』 231호, 42) 다른 하나는 공인으로서의 최장집교수의 건국사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조선일보사의 입지를 높이고 남한 사회에 여전히 넓게 자리잡고 있는 보수적 견해를 한데 모아 조선일보사의 대정부 발언권과 협상력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조선일보사의 숨은 책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없다면 별의미가 없(고), 또한 이상은 현실의 가능성과 결부되지 않으면 공허하다”(기든스 1998, 32)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공인이라면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현실의 가능성과 결부’되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여론의 향배를 염두에 두면서 타협의 여지를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자일 때의 주장이나 신념이 공인이 되고 나면 현실과의 타협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본다면, 더 더욱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은 학문과 정책을 분리해서 정책에 한정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혹 학자의 연구논문이 직접적으로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특정의 사안에 한정시켜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Ⅲ.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 논문을 둘러싼 쟁점

최장집교수 논쟁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은 한국전쟁에 관한 최장집교수의 주장과 해석 가운데 어떤 측면이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필자가 보건대 가장 핵심적이라 생각하는 다음의 3가지 쟁점, 즉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가 문제제기한 것 중에서 1)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2) 한국전쟁은 개전 초반 민족해방전쟁, 3) 좌파는 혁명적, 우파는 반혁명적이라는 쟁점들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최장집 1996, 76) 것으로 최장집교수가 기술함으로써 제기된 이 쟁점은 사실은 ‘역사적 결단’이라는 서술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판단적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일보사는 역사적 결단이란 표현은 그러한 결단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최교수가 역사적 결단 운운 하는 것은 한국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 내지는 그 시작으로서의 남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장집교수는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한국일보』 98/10/24)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최교수는 한국전쟁 내지는 김일성의 전면남침에 대해 이는 오판의 결과 “북한권력의 오만과 무절제가 빚은 참상”(『중앙일보』 98/11/14)이며, “국제정치와 전후 국가체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야의 협애함”(최장집 1996, 76)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한국전쟁에 대한 이러한 양 측면의 표현과 서술이 자칫 독자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면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김일성의 전면남침을 두고 ‘역사적 결단’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표현과 ‘오판’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둘 다 씌으로써 최장집교수는 나름대로 한국전쟁에 대해 균형된 해석 내지는 최교수의 의욕대로 총체적인 이해를 제시해 보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면 그만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전면남침을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학자가 한번 생각한 것을 갖고 뭐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될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아마도 조선일보사는 부정하겠지만, 이 논쟁에는 한국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배 세력간의 정치적 권력투쟁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혹은 그와 함께 조선일보사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배후에 깔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반면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학계에서의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인 것으로 일단 일차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학술적 표현의 의미가 사법적 판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 정치학자로서의 민망함이 가지지 않는다. 법원이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보다는 특정의 사후 해석에 의존하여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딘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어휘나 문구는 특정의 부연설명이라든가 의미부여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은 최교수가 뜻하는 의미로서보다는 조선일보사가 주장하는 바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더 일반적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최장집교수가 역사적 결단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필자에게는 그것

은 변명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를 승자의 기록인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의 전면남침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과 그냥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지, 만약 전면남침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최고수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민중의 희생도 민족통일이라는 전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되면서 김일성의 선택은 ‘역사적 결단’인 것으로 미화될 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 최고수가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다른 표현을 쓸 것이지 괜스레 자기 특유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독자를 혼란시켰다는 불만이 가지지 않는다.

2. 한국전쟁은 개전초반 민족해방전쟁

한국전쟁의 성격을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려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최장집교수는 한국전쟁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특히 첫 번째 시기인 6월 25일 38도선에서의 전면 개전으로부터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이 미공군과 해군에 한국군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미국의 개입결정 때까지의 전쟁을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최장집 1996, 126)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최고수의 설명은 곧바로 최고수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는 조선일보사의 문제제기를 낳았고, 이에 대해 최고수는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용부호를 달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지만, 저의 본의는 아닌” 것이라 얘기하면서, “다만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좌파쪽의 용어를 빌려쓴 것이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고 또 한번 자기변명을 하고 있다(『중앙일보』 98/11/19, 4). 이어 “한국전쟁을 연구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 당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전통주의에서 쓰는 용어만 가지고는 당시 실상들을 정확히 서술할 수가 없(어서)…고심 끝에 용어 사용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좌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끌어다 쓴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것이 최장집교수의 변이다(『중앙일보』 98/11/19, 4).

조선일보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선 최장집교수 본인의 얘기처럼 자신이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생각해 본적이 한번도 없고 다만 용어만을 빌려다 쓴 것이라고 본다면, 최고수를 두둔하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조선일보사

는 최장집교수의 글을 왜곡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만약 최장집교수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보지 않았다면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식으로 기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상 학자가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표현을 인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에 동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동감하지 않으면서도 인용을 하는 경우는 인용과는 다르게 보는 혹은 유희를 하는 어떤 형태의 필자의 견해가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최장집교수는 한국전쟁의 개전 초반의 성격에 대해 그것은 민족해방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예를 들어 ‘남북통일전쟁’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민족통일전쟁’이라는 등의 어떤 최장집교수 나름의 성격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⁵⁾ 그런데 최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한 자신의 다른 해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민족해방전쟁이란 표현을 써 놓고는 그렇게 생각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자로서는 문제가 많은 연구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⁶⁾

최장집교수가 한번도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왕 문제가 제기된 마당에 한국전쟁의 민족해방적 성격을 둘러싼 1980년대 NL파와 비NL파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이하 최봉대 1990, 48-52 참조). 우선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보는 NL파의 주장은 1948년 남한의 단정수립을 단지 미군정이라는 식민지 지배체제의 형태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NL파의 민족해방전쟁론적 시각에 대해 비NL파는 남한민중을 단지 ‘해방의 대상자’로 치부하고 1945-50년의 남한민중의 항쟁을 제대로 위치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가하면서, 한국전쟁은 세계적 범주에서의 체제간 대립이 내재화되어 나타난 대

5) 필자는 한국전쟁을 해방 전후 5년사에서 최대의 정치적 과제인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수행된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본다면, 김일성의 전면남침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통일시키려는 전쟁이었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침은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를 통일시키려는 전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6) 그러나 최장집교수에 대한 이러한 기술상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최장집교수의 사상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정당함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리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이와 같은 한국전쟁을 둘러싼 NL파와 비NL파간의 논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만약 NL파의 주장대로 남한의 이승만정부가 미국의 지배라는 신식민지적 사회구성 위에 얹혀 있는 정치적 상부구조라면 북한의 김일성정부도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는 유사한 형태의 소련의 지배라는 식민지적 사회구성 위에 얹혀 있는 정치적 상부구조인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방 3년간의 시기에 북한이 남한에 비해 최소한 정치권력적 측면에서는 좀 더 해방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1945-48년간 남한은 미군정의 직접통치하에 있었고 북한은 소련의 간접통치하에 놓여 있는 차이에서 나온다고 볼 것이지만, 이러한 차이도 1948년 8월 이후로는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 북한의 전면남침에 의해 시작된 한국전쟁에 대해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는 김일성정부와 이승만정부의 많은 유사성을 무시하고 해방 초기의 조그마한 차이를 부풀려 강조하는 불균형과 편파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1950년을 전후하여 민족해방의 과제를 논의하는 경우 그 주체와 방식은 유사한 신식민지적 사회구성 위에 얹혀 있는 정치적 상부구조로서의 김일성정권이나 이승만정권에 의한 위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한국민중에 의한 자발적인 혁명의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리고 필자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한마디로 규정짓는 명쾌함 보다는 1)남북한 사회모두의 사회구성에 대한 보다 균형된 천착, 2)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까지를 포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계전략과 대동북아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3)1945년 이후 남북한 모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권력투쟁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보다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는 전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한국전쟁의 복잡다단한 기원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최장집교수는 근 3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전쟁을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서의 전쟁의 형태와 의미를 천착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서 필자의 짚막한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최교수는 한국전쟁의 첫 번째 시기를 6월

25부터 27일까지의 3일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보다는 최교수의 지적처럼 “전쟁 발발 1년 전에 이미 준전시상태 내지 내전상태가 시작되고 있었던”(최장집 1996, 121) 것으로 본다면 한국전쟁의 첫 번째 시기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전면남침 이전의 시기로 설정하는 게 최교수가 강조하는 바의 한국전쟁에 대한 총체적 해석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시기구분은 6월 25일을 전후하여 그 이전의 ‘제한적인 내전’ 시기와 그 이후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까지의 ‘전면적인 내전’으로 나누어 5개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최장집교수의 논지에 더 부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의 첫 번째 시기를 6월 25일부터 산정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을 6월 27일 미국의 한국전 개입 결정 때까지로 보기보다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펴는 때까지로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3. 좌파는 혁명적, 우파는 반혁명적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면서 최장집교수는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한국전쟁의 두 번째 시기부터 한국전쟁은 “혁명적 민족주의세력 대 분단세력이라는 민족 내부의 모순이 폭발하여 표면화되는 내전”으로부터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미국이 전면에 나서 한국의 혁명적 민족주의세력과 싸우는 전쟁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최장집 1996, 126). 이로 인해 조선일보사는 최교수가 좌파는 혁명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결과적으로 좌파에 대조되는 우파는 반혁명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첫째, 최장집교수가 ‘혁명적’이라는 표현에 함축하는 바가 반봉건인지 반자본주의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필자가 보건대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한국의 좌파만이 반봉건 사회주의지향이라는 의미에서 혁명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파도 반봉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고 보아야 보다 균형적인 시각이 아니냐는 것이다. 둘째, 최장집교수 역시 대개의 경우 우파는 분단에 안주하려는 수구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좌파는 통일지향의 민족주의세력인 것으로 양극화시킴으로써 좌파, 특히 김일성정권 역시도 이승만정권 못지 않게 분단세력임을 지적하는데 소홀히 하는 혹은 김일성정권은 이승만정권과는 달리 혁명적 민족주의세력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때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 역시 “냉전적 선협성으로부터 비롯된 북한연구의 기형성”(김연철 1998, 49)을 극복해 나가는 1980년대 후반의 사회과학적 연구성과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식의 ‘反냉전적 문제제기’에 내재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중심적 접근의 한계”(김연철 1998, 44)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전쟁을 포함하여 현실정치에 내재하여 있는 “복잡한 중층적 구조”(강정인 1998, 24)를 소홀히 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1945년 이후 시기 남북한 모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권력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한국사회의 좌-우 이념적 대결을 보면 좌-우의 양분론적 대조가 얼마나 단순논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즉, 1945년 이후 5년—그 이후의 기간에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싶지만—동안 한국내 다양한 스펙트럼상의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혁명적이라느니 반혁명적이라느니 혹은 사회주의 세력이라느니 민족주의세력이라느니 하면서 상극적인 대결로 비화되어 나가게 된 하나의 이유는 물론 국제적 냉전구조가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특정의 이데올로기가 절대명제적 정당성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념적 지향의 절대화와 고집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정국에서 어떤 가치를 내걸어야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 더 유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선택되는 자기정당화 논리이자 정치적 무기로서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기에 좌-우 이념적 대결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내재하여 있는 권력투쟁적 측면에서 해방정국을 바라본다면, 최장집교수가 강조해 마지않는 이른바 “민족독립과 민족자주의 원리에 입각한 민족통일국가의 수립과 민주적 사회질서의 수립을 위한 노력”(최장집 1996, 107-108)이 어찌 좌파나 우파 어느 한 세력만의 독점적인 영역의 것일 수가 있겠는가. 다만 최장집교수처럼 민족자주를 제일의 과제로 생각하는 학자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우파적 성향의 정치인들⁷⁾인 경우 중국적으로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 역학관계에 대한 고려와 수단들을 더 중요시한 나머지 어떤

7) 사실 이 우파 정치인들의 경우도 예를 들면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대조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우파적 성향의 정치인들 모두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특정 시점에서는 민족자주의 가치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류하거나 제한하는 행태들을 자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투쟁이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민족자주의 가치라는 것도 상당한 정도로는 좌·우 이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려되고 제시되는 측면도 크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민족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좌파적 성향의 정치인들 — 특히 맑스-레닌주의 국제주의적 지향을 고려할 때 — 이 민족자주를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선전해 다니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의 지지확보와 정치투쟁의 정당화 방편으로서 민족주의가 이용되었던 하나의 사례가 아니냐는 생각이다.

IV. 맺는말

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쟁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이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학문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 다른 사람의 다른 견해를 존중해 주는 관용과 개방성 그리고 다원성이 한 수준 더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한 10년전 쯤에 최교수의 논문과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면 과연 최장집교수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가 그 만큼은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학계에서의 논쟁으로 인해 최장집교수는 곤혹과 낭패를 면하지 못해 마음이 썩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굳이 위안을 삼는다면 이번 논쟁을 거치면서 한국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의 문제 그리고 정치학자의 학문하는 자세와 사회참여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가다듬게 해주고, 한국사회에서 정치학에 대해 어떤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은 하나의 반대급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번에 조선일보사가 최교수의 논문을 문제삼아 제기한 논쟁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헐뜯기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이러한 소모성 논쟁

마저도 한국사회가 한단계 더 높은 사회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치뤄야 할 홍역이자 통과역례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가 보다 많은 관용과 다양성을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진전되어 나가리라 믿고 싶은 필자로서는 최장집교수와 조선일보사가 각자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의도치 않은 결과”(Vernon 1979)로서 한국사회의 전향적 진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카터 에커트교수의 지적처럼 “민주주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이며, ... 계속 쟁취되고 혁신되어야 할 그 무엇”(『한겨레신문』 98/11/2, 7)이라고 본다면, 최장집교수의 곤혹은 바로 최교수가 그렇게 갈망해 마지않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쟁취와 혁신을 위해서 요구되는 하나의 시련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장집교수가 이번의 논쟁을 거치면서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서 국민들에 대한 배려를 넓혀 나가는 계기로 삼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1) 혹 자신들로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개혁가로서의 오만과 보수층에 대한 멸시 모두를 다 털어 버리고, 2) 최교수가 강조해 마지않았듯이 “권력의 오만에 빠지지 않는 겸양”(최장집 1998, 12)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3) 나아가 혹 가능하다면 최교수가 아끼는 민중뿐만 아니라 민중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 — 이들도 모두 1999년 현재는 물론이고 21세기에도 한국사회의 공동운명체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숙명을 함께 지고 있는 최교수의 이웃이자 친지들이 아닌가 — 까지도 어떻게 포용해 나갈 수 없을까 하는 ‘가능성의 예술’로서의 정치를 보다 폭넓게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이 또한 최장집교수가 그렇게 바라 마지않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이 한단계 더 진전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본다.

참고문헌

- 강정인. 1998.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의과. 1998. 『최장집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왜곡·음해 보도 관련자료』, 11월 11일.
- 기든스, 앤서니 지음, 한상진·박찬욱 옮김. 1998.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연철. 1998. “북한연구에서 인식론 논쟁의 성과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 김용현. 1998.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정책: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대응,’” 『정치비평』, 5호, 가을/겨울.
- 사르트르, G 지음, 이행 옮김. 1990. 『민주주의이론의 재조명 II: 고전적 문제들』. 서울: 인간사랑.
- 『시사저널』, 1998년 12월 3일자 커머스스토리.
- 양길현. 1998. “21세기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바람직한 리더쉽과 치적,” 한국정치학회 춘청지회 주최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리더쉽 치적과 공과’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논문.
- 우중창. 1998.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월간조선』, 11월호.
- 이종석.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 『인물과 사상』, 1998년 12월호.
- 『조선일보』, 1998년 10월 23일.
- 『조선일보』, 1998년 11월 5일.
- 『중앙일보』, 1998년 11월 19일.
- 『중앙일보』, 1998년 11월 14일.
- 『중앙일보』, 1998년 10월 24일.
- 최봉대. 1990.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 성격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서울: 태암.
- 최장집. 1998. “1997년 대선과 새정부의 개혁과제,” 『사회비평』, 제18호.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한겨레신문』, 1998년 11월 2일.

『한겨레신문』, 1998년 10월 27일.

『한겨레 21』, 제231호, 1998년 11월 5일.

『한국일보』, 1998년 10월 24일.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Vernon, Richard. 1979. "Unintended Consequences," *Political Theory*, Vol.7, No.1, February.